

이재명 “檢 추가소환,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니 가겠다”

국회서 기자간담회…“검찰, 수사 아닌 모욕 주기 위한 정치 행위”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검사정권, 야당 말살하고 장기집권 꿈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한편 정치적 고조를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민심의 지지를 모아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뺨한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추가 소환에는 응하겠되, 소환 요구가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후 재판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명분 싸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내일, 내일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저하고 변호사하고 가겠다”며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 오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진행된 첫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러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제게도 남은 신문 분량이나 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지 않던 것을 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 추가 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수사가 아닌 모욕을 주고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했지만, 검사독재정권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들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기가 부정할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

여당 집단 퇴장…민주, 일정 합의 불발시 단독 상정 검토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한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승자독식 끝내자”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

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30일 공식으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전체의원의 3분의 1을 훌쩍 넘긴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개편 등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원모임은 이날까지 총 120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해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며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총선이) 치러지면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개헌까지 완수해달라”며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승자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반드시 끝내자”고 했다.

김 의장의 당파대로 의원모임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롯해 우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광주시당 권리당원 정비 ‘조직 강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은 30일 조직 강화를 위해 권리당원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소속 39만 당원 가운데 권리당원 6만 명이 대상이며, 약정당비를 최소 3개월 이상 미납했거나 다수의 당원이 특정주소지로 등재된 경우,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권리당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당원 정비는 8개 지역위원회별로 직접 연락을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되는 민

생 파탄과 검찰독재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당원 정비를 통해 당세와 당원 결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시당 관계자는 “당원 정비는 통상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당원 결집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은 2016년 24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 기준 15만 명이 증가한 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기 라운지

명진 시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을”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명진(민주·서구2)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5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더 급속히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인구감소·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 성남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에 85만㎡ 규모의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권일 기자 cki@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융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동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서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